

강기정·홍준표 대구-광주 교차방문 '달빛동맹' 강화

姜, 2·28민주운동기념식 참석
洪, 무등산 방문 등 1박2일 일정
군공항 특별법 국회 동시 통과
지역 핵심현안 해결 위한 공조

‘달빛동맹’을 맺은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양 도시를 교차 방문하며, 민선 8기 현안 해결 의지를 다진다. 광주와 대구는 군공항 특별법 국회 동시 통과를 비롯해 달빛고속철도 조기 착공, 2038하계아시안 게임 유치에 대해 공동 대응하고 있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기정 광주시

장이 28일 ‘제63주년 2·28민주운동 기념식’ 참석차 대구를 방문한다. 강 시장은 이날 오전 2·28민주운동기념탑 참배를 시작으로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기념행사를 함께한다.

이어 강 시장은 고향사랑 기부행사 및 홍준표 대구시장의 비엔날레 입장권 구매 행사에도 참여한다. 이후에는 홍 대구시장과 차담이 예정돼 있다.

지난해 11월 두 시장이 ‘민선8기 달빛동맹 협약서’를 통해 양 지자체의 상생을 약속한 만큼 이번 차담은 핵심현안 해결을 위한 공조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선8기 핵심현안으로는

달빛고속철도 조기착공과 시민 친화적 도심하천 프로젝트, 2038 하계 아시안게임 유치 등이 있다.

특히 ‘2038 광주·대구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동의안이 광주에 이어 대구 시의회에서도 의결되면서 이번 차담에서 두 시장은 정부 승인을 위한 철차돌입에 머리를 맞댈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두 시장은 광주·대구 최대 현안인 군 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해 협력의지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군공항 특별법’과 ‘대구공항 특별법’은 현재 국무위와 국토위 법안소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중이

다. ‘대구공항 특별법’은 국민의 힘 전당 대회가 열리는 3월8일 이후 국무위 법안 소위에서 재심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소위 통과를 위한 두 지역의 공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두 지역이 국회에서 ‘군공항 특별법’ 동시 통과를 추진하고 있어, 대구공항 특별법이 이번에도 차질을 빚을 경우 광주도 악영향이 우려된다.

무등산 정상이 개방되는 3월4일에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무등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정대로라면 홍 시장은 3월3일 광주에 도착, 1박2일 동안 광주에 머물며 지역을 둘러볼 계획이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해 11월 광주시청에서 달빛동맹강화 협약을 체결한 뒤 “대한민국은 남북으로만 유통과 소통이 이뤄지는 기형적인 구조를 80년간 갖고 있었다”며 “달빛 동맹을 계기로 동서가 서로 소통하고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광주시와의 협력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어 “1991년 3월부터 1992년 8월까지 광주 북구 우산동 모 아파트에 살았다”면서 “(광주는) 인연이 많은 도시다. 무등산에 오른 횡수 만도 10번”이라며 무등산과의 인연을 소개하기도 했다.

박상지 기자 sangji.park@jnilbo.com

李 체포동의안 부결 민주, 대거 이탈표

찬 139·반 138·기권 9 등 20표
단일대오 깨져 ‘후폭풍’ 거셀듯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최소 31표 이상 나와 당 지도부가 줄곧 강조해온 단일대오가 사실상 깨지면서, 후폭풍이 거셀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출석인원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가깝스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이에 따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없이 영장이 그대로 기각됐다.

민주당 의원은 169명 전원이 참석해 표결에 참여했으나, ‘압도적 부결’을 자신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해 투표 후 기표함으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바라보고 있다.

던 당 지도부의 예상과는 달리 반대표(부결)는 138표에 그쳤다.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겨냥해, “성남시가 땅 작업에 수용권을 행사해주고 인허가를 원하는 대로 책임져주고 경쟁사까지 다 막아줬는데 김민배 일당이 무얼 잘했다고 성남시민에게 돌아 가야할 돈 수천

억원을 가져갔느냐”며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고 체포동의의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당 대표는 신상 발언을 통해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려는 헌정사상 초유의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역사적인 한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고 구속영장의 부

당함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구속영장 청구 이후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해왔다.

한편 이날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무효표 논란이 불거지며 40분 가량 개표가 지연되기도 했다. 무효표 논란이 불거진 2표에 대해, 국회의장의 판단에 따라 각각 반대 1표와 무효 1표로 분류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관련기사 3면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3·1절... 1일자 신문 쉽니다



90%이상 공원녹지를 확보하였으며 초과된 민간개발 수익은 다시 시민들을 위해 쓰이게 됩니다.

(광주광역시 수랑근린공원 조경도, 상기 이미지는 위원회 심의 및 영향평가, 실사계획인기협의, 시민의견변명 등의 사유로 인해 변경될 수 있음)